

개 요

나의 일과 미래가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2018. 7. 27



관계부처 합동

- ☐ 본 혁신방안은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담은 미래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청사진임
- ☐ 거시적인 미래사회 변화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직업교육훈련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과 면밀히 협력하여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주요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본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음
 - ※ 3대 기본방향, 5대 추진전략, 20대 주요 과제, 64개 세부과제
 - 특히, 산업계·노동계, 공급자(기관, 교·강사), 수요자(학생, 재직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전문가, 국민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함
- ☐ 본 혁신방안은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훈련, 무형식 교육 등 직업생애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되, R&D 등 연구 및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분야는 제외하고 있음
 - ※ OECD는 의학, 법학 등 높은 수준의 전문직종을 직업교육훈련 범위에 불포함
 - 대상 측면으로는 재학생, 재직자, 실업자 등 전통적인 직업교육훈련 대상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핵심인재 및 (신)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음
- ☐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은 동 방안에서 제시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추진하고,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실행하게 됨

❏ 목 차 ❏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II. 미래사회 변화와 직업교육훈련의 도전	4
III.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현 주소	8
IV. 비전 및 기본방향	11
V.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14
1.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2.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3.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확충	
4. 사람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	
5.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붙임 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33
붙임 2. 주요과제 목록 및 관련 부처	34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 변화하는 미래 사회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 구조 변화**를 촉발하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특히, 일자리 변화(소멸-진화-창출), 직무의 변화 등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정체, 사회보험 재정 고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실직 또는 퇴직 중장년층 교육훈련 등 **일자리 정책 대상의 변화** 예상
 - **소득 및 교육비 격차 심화**로 인해 계층이동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
 - 기술 혁신과 디지털 격차는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하는 새로운 위험 요인
- ※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 증가('06년 29% → '13년 43.7%, 통계청)

□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변화 필요성

- 직업교육훈련은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에 각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수단**이며, **사회통합 및 혁신성장**의 기반
 - 하지만 생산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양극화 등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대비**는 부족한 상황
- ※ 기술수준·교육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적응도 평가, 세계 25위에 불과(UBS, '16)
-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혁신이 필요
- **직무역량 개발기회를 전 생애에 걸쳐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급변하는 미래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리더십 필요

⇒ 향후 직업교육훈련이 나아가야 할 혁신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내일을 준비하여, 내일이 행복한 사회’** 실현

[참고] 직업교육훈련의 의의

- **(개인적 의의)** 직업교육훈련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
 - 일과 직업은 생계수단이라는 전통적 의미를 넘어서 **개인의 다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대두
 - ※ 한국인의 직업의식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업의 생계수단 측면 중시하는 사람은 11.0%이며, 가치실현 측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62.5% (정윤경 외, 2014)
 - **(사회적 의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현과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
 - 적절한 직업을 갖고 정당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직업교육훈련은 중요한 복지 수단** 중 하나
 - 아울러 **시민으로서 올바른 직업관·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인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 **(경제적 의의)** 국가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맞추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적절하게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
 - 인적자원은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천연자원과 달리 한계가 없어 선진국들은 양질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
 - **직업교육훈련**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노동의 양과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 수행
 - ※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고도성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은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동
 - 특히 우리나라는 부족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추진해 왔으며,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
 - 미래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혁신**으로 산업과 경제발전에 맞추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혁신성장에 기여**
- ❖ 과거의 직업교육훈련은 경제적 의의 측면의 접근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개인 및 사회적 의의 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2. 그간의 추진 경과

□ 설계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17.7)
 - ※ 국정과제 52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과 과제' **정책연구**(‘17.11~, 직능원)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과 과제'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18.1)
 - ※ (정부) 교육부 차관(단장), 기재부·산업부·노동부·중기부·과기부·여가부 국장(민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직업교육학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직업계고교장협의회
- 민관합동 추진단 회의(1~4차, '18.2~7) 및 실무작업반 회의(1~8차, '18.2~6)

□ 의견수렴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관련 **미래평생직업교육포럼** 개최 ('17.7~12)
 - ※ (1차) 제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직업교육('17.7.25), (2차) 미래 환경변화와 직업교육('17.8.28), (3차) 미래직업교육정책 방향과 과제('17.12.6)
- 전문가회의, 직업교육 학술대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17.10)
- **대국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 ('17.11.~'18.2)
 - ※ 44건의 국민 아이디어 접수, 우수 아이디어 10개 시상
- 특성화고, 전문대, 산업별협의체 등 **분야별 현장 의견 수렴**(‘18.3~)

❖ **(중등)** 직업계고 교장 협의회 의견 수렴(4.11), 직업계고 교사대상 간담회(7.13), 직업계고 학생·학부모 대상 간담회(7.19), 시도교육청 담당관 회의(7.18), 교직원(교총 7.13, 전교조 7.20)
 ❖ **(고등)** 전문대 교무처장 협의회 논의(4.13), 전문대교협 협의(7.19), 후학습참여대학 간담회(7.20)
 ❖ **(산업계)** 16개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담당자 의견 수렴(4.5)
 ❖ **(경단녀)** 경단여 강사 의견 수렴(5.17, 새일센터)
 ❖ **(노동계)** 한국노총(6.1) 및 민주노총(6.8) 협의
- **공청회 개최**(1차 영남권 7.9, 2차 호남·충청권 7.12, 3차 수도권·강원·제주 7.18)

II. 미래사회 변화와 직업교육훈련의 도전

1. 직업·직무 수명의 감소와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 직업·직무 수명의 감소와 일자리 불확실성 증가

- 지식·기술의 생성·소멸 주기가 짧아져, 기존의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등 **일자리**의 변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25년 노동인구 70%인 1,800만명 일자리 위협(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16)

- 더불어 기술진보는 일자리의 **직무(tasks) 내용**에도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를 통해 직업과 일자리에 영향 초래

※ 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업무방식, 직무역량의 유효기간이 더욱 짧아져, '20년 이후에는 축적한 역량의 절반 이상이 유효하지 않을 것 (대한상의, '17.7.)

- 빠르게 변하는 지식·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직업기초역량의 중요성** 부각
-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직무전환, 이직·전직** 수요와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양성과정 교육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직업생애에 걸쳐 지식·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훈련이 중요

□ 일자리·근무형태의 다양화

- 초고속 무선통신,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원격·모바일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업무의 시간과 공간의 경계** 약화

- 일시적이고 독립적인 일자리 증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직업* 출현, 플랫폼 종사자**, 메이커, 1인 기업가 시대 도래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

* 두 개의 조직에서 고용되어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겸직

** 각 이코노미(Gig economy)의 일종으로 거래계약에 기반한 1인 자영업자

-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이 아닌 다양해진 일과 근무형태에 맞추어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제공이 필요

⇒ 전 생애에 걸쳐 어느 시점에서든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고 다양한 근무형태도 맞출 수 있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체계 필요

2.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기존 산업 또는 기술에 IC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산업 및 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의료 및 서비스 산업 확대 등 미래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산업 및 직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

< 12대 신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단위 : 천명, 산업부) >

	주력산업 유망분야						유망신산업						합계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선박	첨단 신소재	OL ED	시스템 반도체	IoT 가전	로봇	에너지 신산업	고급 소비재	바이오 헬스	항공 드론	AR /VR	
'15	7.5	1.0	16.3	11.9	24.9	26.8	16.6	13.6	74.2	6.6	0.4	2.8	202.7
'25	52.8	12.0	31.2	19.4	53.1	45.3	83.9	67.8	136.5	33.9	3.5	45.4	5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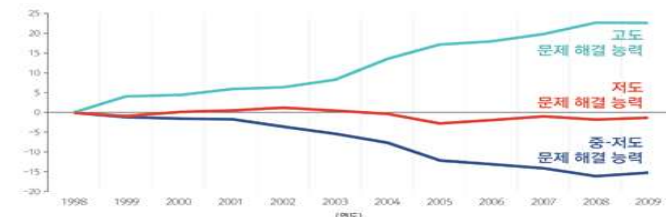
- 특히 신기술분야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아 **경쟁력 있는 인재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분야 선점이 필요하나, 해당 분야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지능정보기술 발달로 인한 직업구조의 변화

- 로봇,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달로 단순 반복적인 일은 자동화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고부가가치·고숙련 업무는 증가** 전망
- 이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고용이 증가, 관리직 및 기능종사자는 감소

※ 고도의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의 고용률은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중·저 수준 고용률은 감소, 저수준은 경제적 대체가능성이 낮아 변화 적음

< 문제해결능력 수준에 따른 고용률 추이 (출처 : 2013, OECD) >



- 기술 확산이 직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기술·지식 창출이 가능한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체계 필요

⇒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형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고숙련 인력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 필요

3.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 우리나라의 출산율 및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7년에는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점을 기록
 - ※ 출생아 수 : ('07) 493천명 → ('17) 357천명 / 합계출산율 : ('07) 1.25명 → ('17) 1.05명
- 이에 생산가능인구는 '16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 **평균수명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 '16년 기준 3,763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65년 2,062만명으로 감소 예상(통계청)
-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여 **국민 한명 한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가 매우 중요**
 - 이와 더불어 출산·육아 후 경제활동 복귀를 원하는 여성 잠재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직업교육훈련 확대 필요
 - ※ 여성고용률('16) : 56.1%, OECD 평균(59.4%)
 - ※ 국내 기업체 임원(11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경단녀 채용을 원치 않는 이유로 55.6%가 회사를 떠난지 오래돼 실무적응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서울신문 '15)

□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 우리나라는 '26년에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나, **노년에 대한 개인의 준비는 미흡하며 사회안전망도 부족**
 - ※ 노인(65세 이상) 상대빈곤율은 45.7%('15)로 OECD 최고 수준, 사회적 노인 부양비용 증가 예상('07년 15% → '50년 77%)
- **신중년의 이·전직에 대한 관심 증가**, 약 72세까지 소득 필요성 등 **늘어난 노동시장 활동기간으로 직업교육훈련 요구도 동반 상승**
 - ※ 실질은퇴연령('16)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음('16, OECD)

⇒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이·전직, 재취업, 퇴직 등 개인의 삶의 전환기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체계 마련 필요**

4. 경제·사회적 양극화 심화

□ 양극화로 인한 사회 역동성 저하

- 성장기조 둔화에 따른 고-저소득층 간 소득격차 등 **소득분배 악화**,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
 - ※ 상대적 빈곤율(OECD, '17) : 한국 14.4%, OECD 평균 11.4%, 3만불대 국가들 12.2%
 - ※ 비정규직 비율(OECD, '15) : 한국 22.4%~32.4%, OECD 평균 11.8%
 - ※ 대·중소기업 월평균임금 격차(고용노동통계포털) : ('11) 약 160만원 → ('15) 약 190만원
-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해 계층이동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체적인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 ※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 증가('06년 29% → '13년 43.7%, 통계청) '성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믿음 : 한국 51% < 미국 64% < 중국 67% (KDI, '13)
- 4차 산업혁명 기반 **新성장체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훈련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기회 적극 보장 필요**

□ 기술 발전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 기술 진보로 단순 반복에 의한 숙련의 가치는 감소하고 **역량에 기반한 고숙련의 가치가 증가하여 일자리 및 임금 양극화는 심화** 예상
 - 디지털 격차, 다양한 비전형적 임시 일자리(gig worker 등) 증가 등은 **고용의 안정성과 질의 저하**를 초래
 - 이에 기술혁신과 디지털플랫폼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직자 및 중고령층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개발 기회 확대 필요**
 - ※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 : 양극화 심화(61.7%), 대량 실업(14.7%) ('16, 서울경제)
 - ※ 한국 45세 이상의 ICT 기술 활용 문제해결 능력은 10%로 최하위(OECD, '16)
- 기술의 불균등한 확산과 접근성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훈련-고용-복지 연계되는 통합적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평등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 안전망 구축**

Ⅲ.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현 주소

❖ 그간 직업교육을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 체계와 수준으로는 미래 환경변화 대응에 한계

□ 직업교육훈련기관별 현황

○ 중등직업교육

- 일반고 선호 및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직업계고 학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반고(3학년) 위탁과정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은 증가 추세

* 42.2%('95) → 36.1%('00) → 28.9%('05) → 23.8%('10) → 18.8%('15) → 19.9%('17)

-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와 학과·교육과정의 미스매치, 교사의 현장성 부족, 미흡한 교육여건 등으로 직업계고의 지속적인 발전의 한계

- 단기 목표에 치중한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 위주의 교육, 누적된 학습 결손 등으로 직업기초역량 등 미래 변화 적응에 필요한 능력 부족

* 직업계고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15, PISA) : 한국 15%, 일본 4%, 독일 2%

○ 고등직업교육

-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이 모호한 상황으로 사회 의존도가 높으며(98%), 폴리텍은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써 학위·비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면서 단기간에 양적 성장

- 전문대학과 폴리텍은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은 다르나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중복되는 상황이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연계 미흡

* 두 기관 모두 학위(전문학사 또는 산업학사) 또는 비학위 직업교육 제공

○ 직업훈련기관

- 공급자(직업훈련기관) 위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재직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성 프로그램 부족하며 고급화·전문화된 과정 부족

- 평생학습훈련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으며, 성과평가 등 교육훈련의 질 관리체계 미흡으로 성과**는 부족

*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 ('04) 12.7% → ('17) 17.3%

** 국가성인역량조사(PIAAC) : 우리나라는 20대 후반부터 65세 미만까지 급격히 하락

□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집행

○ 지원 및 전달체계 중복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 및 방향 부재로 교육훈련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및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 미흡

-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부처별로 지원정책이 분산되어 있어 정책연계 저조, 행정비용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 애로

- 부처 간 정책조정 부족, 중앙-지자체 간 역할 분담 미흡, 공공-민간 간 협업체계 미비로 정책집행의 효과성 및 성과 제고에 한계

○ 생애 단계별 및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정책 미비

- 학령기 중심의 취업준비 정책이 대부분으로 (입직 전)진로교육, (입직 후) 경력개발, 이·전직 및 퇴직 후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미비

- 대상별·분야별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대상자별 직업교육훈련의 접근성, 질적 수준, 보상 등 격차 발생

※ 대부분의 직업훈련사업은 기업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이 기반이므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와 훈련격차의 문제가 지속 발생

- 자체 여건 및 역량 부족, 장시간 근무, 후학습 체계 미흡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실질적인 능력개발 여건 및 훈련기회 부족*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참여율('15) : 대기업 55.1%, 중소기업 4.7%

- 특히, 비정규직 등 (신)취약계층은 니즈에 기반한 특화된 직업교육 훈련이 필요하나 범용적·단기적인 교육훈련 위주로 활용

□ 공급자, 사업주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 부처 중심의 기능적 지원, 학교 및 기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정책 및 직업교육훈련 제공 부족

- 정부 주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자훈련 등)에서 제공되는 과정은 주로 저숙련훈련으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숙련인재 양성 미흡

- 반면 조정기제의 미흡으로 학생·훈련생의 선호에 의해 개설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바리스타, 제빵 등)은 산업 수요와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이 사업주지원방식*(기업훈련-환급)이며, 이·전직 준비 등 수요자(근로자 등) 훈련수요에 부응한 근로자 개인지원방식은 활용 미흡**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4,351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2,865억원) 등('18)

**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는 활성화 미흡(23만명, '17)

□ 직업교육훈련 질 및 성과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졸업장과 학위,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질적 담보가 미흡하여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교육과정 및 훈련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 교·강사 자격 관리 등 일정 수준의 직업교육훈련 질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인프라

- 분절적·경직된 학제운영, 직업교육(학위)과 훈련(자격)의 연계 부족 등으로 직업교육훈련체계의 유연성 및 개방성 부족
- 인자위(지역 RC, 산업 ISC)의 참여 미흡, 산업체·지역과의 연결망 부재, 산업의 요구에 기민성 부족 등 유기적인 산학협력 기반 구축 미흡
- 직업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성장경로가 미구축되어 있으며, 취업준비기부터 퇴직까지 생애적인 관점에서 진로·직업정보와 상담·지도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체제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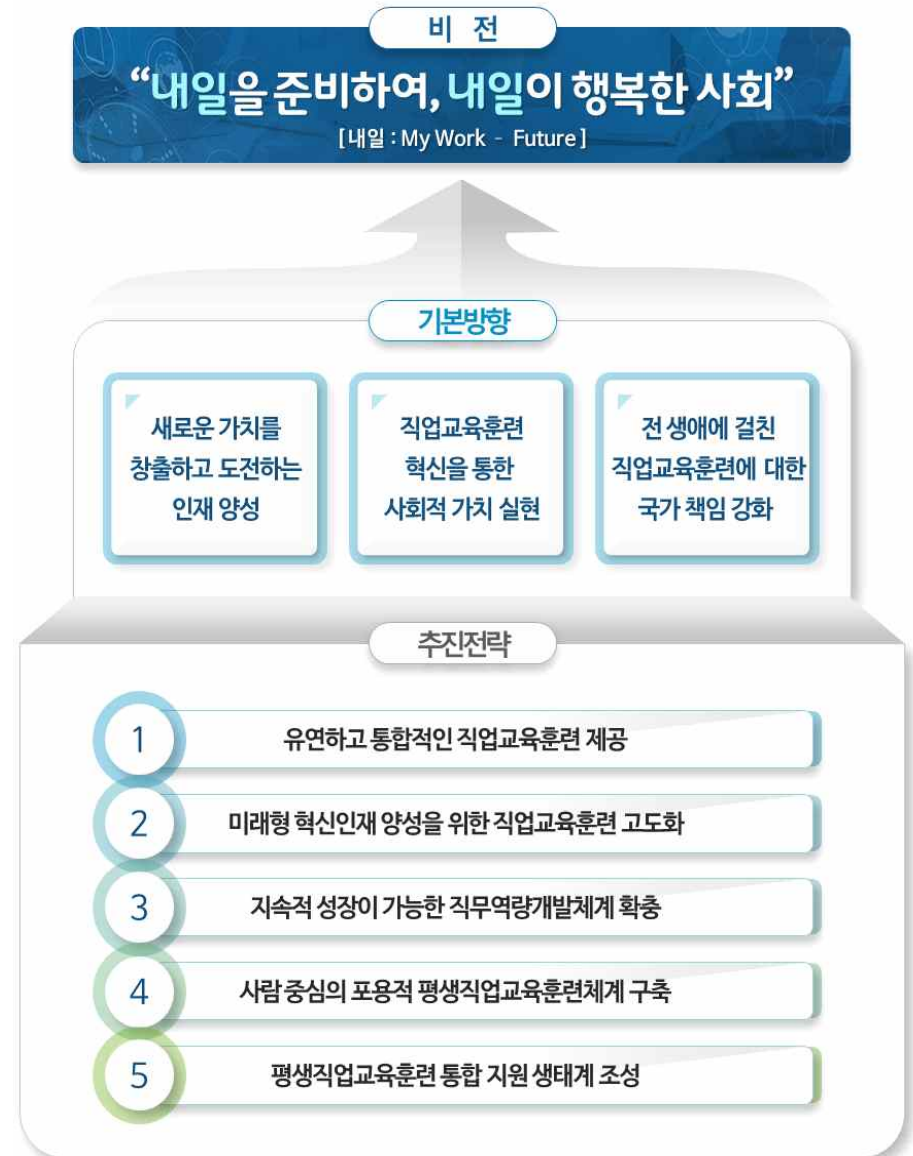
※ 수요자는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지 않고 진로와 직업 결정하고 있어, 직업·자격·교육훈련기관·프로그램·성과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체계적 제공 필요

□ 사회적 여건 부족

-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일반교육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은 낮은 수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임금, 근로환경, 안정성 등)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및 직업교육 비선호 가중
- 노사 간 불신·갈등,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 및 역량 부족, 참여기회 부족 등으로 노사 협력적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기반 취약

IV.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성 : 비전 및 기본방향

< 비전 및 기본방향 >



□ 비전 : 내일을 준비하여, 내일이 행복한 사회

- 미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평생교육** 관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하다, 취업과 고용유지만을 위한 교육훈련은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연계시키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OECD 평균(6.6점)보다 낮으며, 같은 3만불대 소득수준 국가들(6.3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OECD, 2016)

☞ 미래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기초 및 핵심직무역량**을 함양하여 자기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람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의 비전** 제시

□ 기본 방향

- (**혁신인재 양성**) 사람에 대한 투자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이므로 **미래 유망 및 숙련형성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혁신**

※ Godin and Katz(2008) 엄청난 기술변화의 속도를 교육의 질적 변화가 따라 잡지 못할 때 경제성장이 둔화됨으로 물론 소득불평등과 사회통합도 약화

- (**사회적 가치 실현**) 직업교육훈련 투자를 통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받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누구나 역량 개발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포용적 직업교육훈련 강화**

- (**국가책임 강화**) 국가가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질 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훈련 혁신**이 가능하고 정책대상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므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추진

□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구분	As Is	To Be
정책지향	입직 단계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양적 확대에 초점	생애 통합적 평생직업교육훈련 질적 수월성 제고
교육 및 훈련과정	주입식 단순 기능 숙달에 초점 (특정 실무 역량)	미래 핵심역량에 중점 (직업기초역량 + 특정 실무역량)
교육훈련 체계	단선적·분절적·경직적인 직업교육 훈련 체계 (학제간, 학습과 일의 분절적 형태)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직업교육훈련 체계 (학제간, 학습과 일의 연계 시스템)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균인' 맞춤형 교육 학위중심의 프로그램	수요자 맞춤형 교육 다양한 학위 및 비학위 프로그램
교육훈련 선택 주도권	공급자(교육훈련기관), 사업주	수요자 (학생 및 재직자), 개별 근로자 (노조도 참여)
수요자 - 공급자	(수요자) 학령기 학생 및 재직자 (공급자) 직업교육훈련기관 중심	(수요자) 모든 국민 대상 (공급자) 직업교육훈련기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
교육훈련 시기	학령기에 집중하여 고강도 교육 (입직을 위한 취업준비에 초점)	생애 단계별 고른 배분 (입직전 및 입직 후도 학습 강조)
산업영역과의 관계	산업수요와의 연계 미흡 교육과 노동시장 정보의 괴리 존재	산업수요와의 연계 강화 신뢰성 높은 직업교육정보 생성/관리
취약계층 지원	직업교육훈련 사각지대 존재 적극적인 취약계층 지원 부족	직업훈련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및 교육훈련-복지-고용의 통합적 지원
질 관리	느슨한 학사관리 및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부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강화 등 엄격한 성과관리
정부의 역할	부처별 분절적 정책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부처간 연계 및 통합적인 정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역할 분담
직업교육의 목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 에 기여

□ 예상되는 미래 변화 모습



V.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1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 ❖ **주요과제 1**: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산업현장의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경직적인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유연화**
- ❖ **주요과제 2**: 집체교육 중심, 장기과정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에서 나아가 다양한 근무형식, 학습자의 교육훈련 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화된 방식·형태의 직업교육훈련 제공**
- ❖ **주요과제 3**: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제공을 위해 기존에 서로 분절적으로 운영·제공되고 있던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제도를 연계·통합**

1 직업교육훈련체제 유연화

- 교육과정, 교원 등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 산업계가 운영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혁신형 학교운영 모델** 적용

< 혁신형 특성학교 >

-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자율학교', 교육감 지정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장(감)의 자격, 수업기간, 학생의 진급·졸업 학년제, 교과용 도서사용, 수업연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 운영
- ❖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시설·인프라 구축,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대폭 강화

- 경직적인 학년제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전공 간 원활한 이동과 융합이 용이하며, 다양한 직업교육 혁신 모델 창출이 가능한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예시 >

- ❖ 다양한 학점제 모델을 통해 학생의 희망, 소질에 따른 과정·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 개별화된 학습 실시
- ❖ 학교 간 교육과정 교류·연계를 활성화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경험 (산업체 실습, 외부교육기관 등)을 학점으로 인정

- 급속한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고 수요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 학사제도 유연화·다양화** 추진
 - 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모듈식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사제도 활성화
 - 성인학습자의 산업체 경험학습과 선행학습을 인정하여 학습기간 단축

2 다양한 방식형태의 직업교육훈련 제공

- 국민 누구나에게 시·공간적 제약 없이 원하는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확대**
 - 대학 교양·전공기초 수준의 강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K-MOOC**에 4차 산업혁명 등 전문분야 및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확대**
 - ※ K-MOOC(Korean Massive Online Open Course) : 온라인 공개 강의 플랫폼으로 대학의 우수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
 - 온라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훈련 이러닝 콘텐츠를 탑재·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추진
- 미래유망 산업분야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맞춤 단기 교육과정인 **Match業**(한국형 나노디그리) 도입
 - ※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6개월 내외)
- 현장성 높은 교육을 위해 대표기업이 핵심직무 발굴, 이수자 평가 및 인증에 참여하며 인증서는 취업, 교육훈련 및 학점 인정 등에 활용

< 해외사례 : 나노디그리(Nano Degree) >

❖ 미국 유다시티(Udacity)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6개월 내외의 단기학습 과정으로 운영. 30여 개 기업과 협력해 27개 과정을 운영('18.6 기준)

- 현행 시간제등록제를 개선하여 (가칭)**마이크로디그리***를 도입하는 등 단기과정 확대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제고

* 마이크로디그리 : 기존의 학위(4년 또는 2년 등) 제도와 달리 단기간(3~6개월)에 특정 분야의 강화를 시간제로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하여 인증 받는 제도

- 마이크로디그리의 이수 결과를 관련 자격·학위 취득과 연계 추진

3 직업교육훈련 연계·통합 강화

- 전문대학, 폴리텍, 사내대학, 대학 등 **교육·훈련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영역 조정*,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
 - * 기관 신설시 지역별 고등전문교육기관의 균형 및 지역 인력수급 고려
- 특히 폴리텍 학위과정과 전문대 전문학사과정 등 유사기관 과정은 연계 강화
- 다양한 형태 및 방식의 교육훈련 및 경험이 교육·훈련·자격취득 과정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경험 및 학습에 대한 인정(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활성화
 - ※ 직업계고에서 이수한 과목과 유사한 대학·전문대학의 과목의 학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보급(직업계고-전문대학 협의체 구성·운영)
-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교육훈련 활동을 학점·학력(학점은행제 연계) 및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시 인정하여 중복 학습 최소화
- 장기적으로는 **일·경험·학력·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평가·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추진
-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훈련의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관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연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개인별 누적정보를 진로개발과 계속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및 선행경험 인정제도(RPL)와 연계하여 활용도 제고
 - ※ 평생학습계좌제 :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 정보로 활용하는 제도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 구직자·재직자 대상으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 바우처 제도로 정부지원 직업훈련 이력 관리 중

- ❖ **주요과제 1** : 기술 발전으로 인한 중·저숙련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고숙련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내실화**
- ❖ **주요과제 2** : 단순 지식·기능 중심이 아닌 문제해결력·창의력 등 **직업기초역량 및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전환**
- ❖ **주요과제 3** :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학과·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성 높은 교육훈련 제공**
- ❖ **주요과제 4** : 다양한 교수학습방식 도입 및 현장성 높은 교육훈련을 위한 인적기반을 마련하고자 **교·강사의 전문성 강화 추진**

1 고숙련 인재 육성 체계 내실화

- 숙련된 전문인력 필요 분야의 경우 **산업체 주도로 직업계고와 고등 직업교육기관 간 다양한 연계 모델(P-TECH 등)을 발굴·확산**

< 특성학교-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연계사례 >

- ❖ P-TECH(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 산업체와 연계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문대 수준의 훈련과정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여 융합형·최신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
- ❖ IBM P-TECH (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school)
 - IBM에서 디지털시대 뉴칼라(new collar)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학교와 전문대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한 모델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
 - 원격교육, 시간제등록, 사전경험학습인정(RPL), 단기 교육과정 등 **다양하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여 개방성·접근성 확대
 - 지역사회(지자체·산업체 등)와 연계·협력하여 **지역직업교육센터 역할 수행**
- 실무 및 심화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활성화**하고, **전문대학 교원 자격기준 전면 개편*** 및 산업체 경력 교원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관인증평가에서 활용 추진

* 산업체 경력 포함 등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전문대학의 교수 업적평가에서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배점 상향 유도

- 고등직업교육훈련 기능 강화를 위해 **선진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운영모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고등직업교육 모델 구축 추진**

< 해외 고등직업교육기관 사례 >

- ❖ 일본은 '19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고등직업교육기관(4년제 전문직대학, 2~3년제 전문직단기대학)을 신설·운영할 계획
- ❖ 핀란드의 폴리텍 대학(종합기술대학)은 직업과 관련된 특수교육기관을 통합하여 현장실무중심 교육을 위해 설립(전문학사, 학사학위 수여)
- ❖ 프랑스는 '13년부터 졸업장, 교수, 학비 없이 IT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기관인 에콜42(Ecole42) 신설·운영

2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혁신

-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력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훈련으로의 전환**을 위해 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활성화
 -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상상한 것을 만들어 보는 **메이커교육 활성화**
 - 실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도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 배양**
- 능동적 학습역량 제고를 위해 **직업기초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現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확대*하고 **미래 필요 역량 중심으로 개선**
 - * 고등학교 1학년 대상 학생 자가진단평가 도입 추진
 - ※ 직업의 이동성과 평생학습 위한 일반적이고 전이 가능한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
- ICT 기술 활용 등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특히 직업계고는 SW 교육을 의무화하여 컴퓨팅 사고력 제고
- AI 기반으로 학습자의 수준·패턴을 분석·진단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훈련을 활성화**
 -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흥미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임 학습 프로그램(Gamification)¹⁾ **개발·보급**

1) 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 수립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내용

③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제공

-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 분야 및 유망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구조개편 추진**
 - 4차 산업혁명 및 유망분야에 대한 학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학과를 구조조정하는 등 **직업계고·전문대학 재구조화 추진**
 - ※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자재 마련, 교육과정 개편,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대폭 확대
 - ※ 학교·학과·훈련과정 재구조화 과정에서 산업별협의체(SC·ISC)와 지역별 협의체(RC) 등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현장의 수요를 교육훈련에 반영
 - 폴리텍의 경우 학위과정을 축소하고 학과를 통폐합하며, **고학력 청년 대상 하이테크 과정**과 경단녀·신중년 특화과정을 확대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민간 양성훈련 지속 확대**
 - ※ (예시) '18년 신규검토 직종 : 홈 IoT관리, 드론 제어, 3D프린터 운용 등
- 산업계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훈련 제공**
 - 현장실습 등 산업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 지식·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현장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확대**
 - 직업계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시 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여 현장의 숙련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기술·일자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우수한 인력양성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활성화**
 - **우수한 민간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훈련 심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NCS 심사 기준 완화)
 - 특히 인력양성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으로 선정, 일정 수준의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
 - ※ 과정평가형 자격 : NCS 기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게 내·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민간주도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사례 : 아우스빌등 >

- ❖ 아우스빌등(Ausbildung)은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는 한독상공회의소 주관으로 BMW·벤츠코리아가 특성화고(3학년)와 전문대를 연계하여 3년간 현장실습교육(OJT) 및 이론교육 제공 후 채용하고 있음

- 기술·산업 숙련수요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무 및 융·복합 직무분야의 자격을 신설**하고 **미래수요를 기반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

④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직업계고 **교원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교원 양성과정과 연수를 강화**하여 교원의 전문성 제고
 - 현장의 우수한 전문가를 직업계고로 유입할 수 있도록 **전문교과사범대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하고, 산학겸임교사의 단독 수업* 허용 및 교원자격이 없는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교사자격증 부여**** 추진
 - * 산학겸임교사 처우 개선 및 단독수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한 교사자격부여 활성화
 - 전문교과교원 자격과정에 **산업현장경험을 확대***하고, 학습연구년제 등을 통해 전문교과 교원에 대한 신산업분야 **현장직무연수 기회 확대**
 - * 현 공업계열 교원양성에 한하여 적용되는 1개월 현장실습을 타 계열로 확대
- **훈련기관 교·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인재의 훈련기관 영입을 확대하고, **보수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 기존 HRD 일반교육 중심의 교·강사 보수교육에서 **전공교육 대폭 확충**
- 기업에서 일학습병행 훈련을 담당하는 **기업현장교사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기업현장교사 교육을 수준별로 체계화(기본·심화·보수과정)하고, OJT 교수법, 평가기법 등의 실무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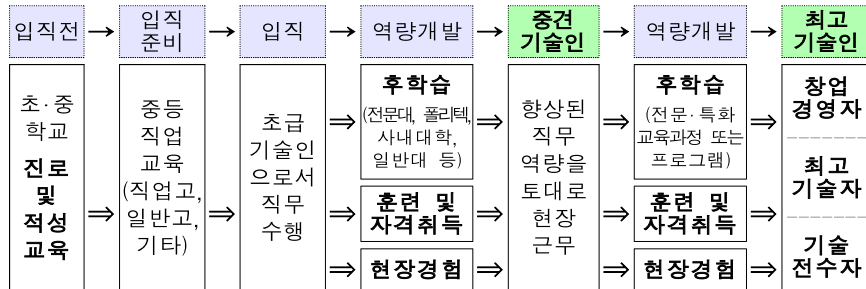
3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확충

- ❖ **주요과제 1** : 학생~성인까지 생애 경로설정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 **주요과제 2** : 입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직자의 직업교육훈련 여건을 마련
- ❖ **주요과제 3** : 선취업자 등 재직자가 후학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재직자의 후학습 접근성을 확대
- ❖ **주요과제 4** : 산업구조 변화 및 인생 2모작에 대비하여 재직자의 이·전직 지원제도 내실화

1 전문직업인 성장 지원체계 구축

-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후학습·훈련과정 개설·운영

< 전문직업인 성장경로 모델(예시) >



- 전문 직업인의 사회적 지위 제고를 위해 기존의 대한민국명장·우수 숙련기술자제도를 개편하여 '한국형 마이스터 제도' 구축

※ 현재 명장·우수숙련기술자제도를 운영 중('17년 59명, '86년 이후 1,070명 수준)이나, 청소년들의 기능·기술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에는 부족

- 학력·경력·자격 등을 감안하여 마이스터를 단계화하고 마이스터에 대한 지원(장려금, 훈련교사·산학겸임교사 채용 우대 등)을 확대

- 진로·직업 지원 유관 정보망을 연계하여 생애 전 단계에서 경로를 설계하고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초등 고학년부터 학생·학부모·학교가 주기적인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입직 이후에도 경로 설계 및 후학습·훈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 진단서비스(생애 HRD 진단) 마련

※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중등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등을 활용하여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히 경단녀, 신중년 이전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지원

- 상담·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정책을 패키지화*하여 안정적인 직업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

* (예시) 직업계고(취업장려금) → 입직(청년내일채움공제) → 후학습(장학금) → 역량개발(내일배움카드) → 국비유학(정부지원) → 중소기업 연구원

- 직업계고-기술병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최소화

- 직업계고 졸업생의 특기병 지원자 우대 선발을 통해 전공이나 특기경력에 적합한 임무수행 및 학업 지속 기회를 제공

※ 군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은행제 기반 원격학습 기회 제공

2 재직자의 직무역량개발 여건 마련

- 재직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재직자의 학습권 보장 확대

- 유급휴가훈련제(유급학습휴가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장기유급훈련 확산을 위한 훈련비·대체인력인건비 등 지원 추진

- 능력개발, 학습 등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 장기적으로 재직자의 학습권 및 학습휴가 제도화 검토

※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교육훈련 관련 협의 실시

< 해외 근로자 학습권 보장 사례 : 스웨덴 >

- ❖ 스웨덴은 '근로자 교육휴가권에 관한 법'으로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모든 종류의 학습권 보장하여 근로자가 교육 프로그램, 시기, 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취미 제외) 주가 예산을 지원(최영렬 외, '05)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하여 재직자가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계 내실화

*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 등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 중장기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직업능력진단·상담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과 체계적으로 연계**

- 기술변화에 대응한 재직자 역량의 유지·향상을 위해 사업주 훈련비 지원체계를 개편, **기술향상·전문 디지털 역량훈련 투자 확대 유도**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훈련비의 범위를 ICT 관련 분야로 확대**

③ 성인학습자 후학습 접근성 확대

-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대상 입학전형제도를 구축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를 다양한 형태·방식**으로 운영하여 선택의 폭과 접근성 확대

* 융합전공제,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등

** 온라인 교육, 시간제, 전일제, 학위제도, 비학위제도 등

- 전문대를 통해 지역 내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후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국립대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대학 확대***

* 4년제 국립대 전체에 후학습자 전담과정 개설 추진

- 후학습자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후학습에 대한 비용부담 절감 추진**

※ 최소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성인학습자 적합 직무,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을 적극 발굴**하고, 과정 개설 희망대학에 지원을 통해 **유망직무·직종에 대한 후학습 강화**
- 성인 및 재직자 재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과목 등에 대한 시간제등록제 활성화

- 대학이 외부 시설을 활용하여 후학습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후학습'을 활성화**하여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제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14조의 2)

- 대학의 사내대학 위탁·운영을 허용하고, 입학자격 범위를 해당기업 재직자에서 동종업계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사내대학 활성화**

※ 사내대학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졸업자는 전문대 또는 대졸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평생교육법 32조)

④ 이·전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공공부문을 통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기업 노동자에게는 기업이 **제공***하도록 제도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진로탄력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이·전직자의 진로 및 생애 설계를 돕고, 이·전직을 위한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교육훈련과 연계

* 진로탄력성 : 어렵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진로 목표를 변화 요구에 맞게 수정해 나가거나 진로역경에 대처하여 극복해나갈 수 있는 역량

-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직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이·전직 희망직종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유사직종) 디지털 역량 등 기초직업능력 중심의 단기(3개월 이내) 훈련제공 (새로운 직종) 디지털 역량과 직종별 기능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중장기(6개월 이상) 훈련프로그램 제공(위탁훈련 중심)

- 신중년 이·전직자 대상으로 **유급휴가훈련제**(유급학습휴가) **활용을 지원**하여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해외 사례 : 이·전직 지원프로그램 >

❖ 싱가포르 'Skills 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 : 40세 이상 경력자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핀란드 노키아(2011) : "노키아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지원, 전직 희망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창업 지원 등 체계적인 퇴직자 지원

- ❖ **주요과제 1** :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지만 직업교육훈련 여건이 미흡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 ❖ **주요과제 2** :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신중년, 경단녀 등 직업교육훈련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 ❖ **주요과제 3** :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 평생직업교육훈련 지원을 강화
- ❖ **주요과제 4**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복지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훈련 제공

1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훈련참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
 - ※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기업현장교사 육성 등 단기 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지원
- 단독으로 직업교육훈련 실시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훈련센터, 산업단지 소재 공동훈련센터 활성화**
 - ※ 재직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야간·주말 프로그램 개설·운영 확대
- 공동훈련센터에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훈련비·시설·장비비 등 지원 확대
- 재직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야간·주말 프로그램** 개설·운영 확대
- 훈련정보 부족, 훈련계획·직무분석·상담 등 훈련실시에 따른 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지정·운영**
 - ※ 훈련계획-행정업무 대행-직무분석-노동자 상담 등 컨설팅

< 해외사례 :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 지원 >

- ❖ 싱가포르 **‘Skills Future SME Mentors’**
 - 중소기업 전담 멘토가 9개월간 학습격차 파악, 격차해소방안 권고, 코칭·멘토링 등 제공 (향후 3년간 2,000개 지원 목표 45백만\$ 투입)
- ❖ 스페인 **‘외부 독립기관’(External entity)**
 - (역할) 훈련 및 정보 제공, 훈련실시 및 비용청구 절차 대행, 훈련 모니터링·조정·평가 등 수행, 훈련실시 수수료, 훈련조직비 등이 수입원
 - (주체)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사공동조직, 자영업자, 경제관련 협회, 훈련기관 등

2 직업교육훈련 사각지대 해소

- **비정규직(기간제·시간제) 노동자 종사유형별로 훈련 필요성, 실시 시기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활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훈련 지원* 강화
 - * 비정규직 훈련수요조사, 훈련대상자 탐색, 프로그램 설계, 정규직전환 훈련 설계, 훈련실시관리, 비정규직 훈련 지원제도 홍보 등
- **영세 자영업자의 역량 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특화과정* 개설·운영**
 - * (예시) 경영·회계·인사관리 등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과정 보급
- **신중년의 재취업 등 인생 2모작 준비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여건 개선 및 기회 확대, 맞춤형 컨설팅·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 유급휴가훈련제 활용 등 **은퇴 전에 미리 퇴직 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생애설계 교육훈련 지원
 - ※ 회사 차원에서 점진적 은퇴기간(약 55세~60세) 동안 근로를 줄이고 교육훈련시간으로 활용
 - 접근성·선호를 고려한 **신중년 특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며, 창업·귀농(산·어촌)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경로 설계 지원**
 - *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등 신중년 친화과정, 퇴직자 대상 귀농귀촌 직업교육 훈련, 보육·유아교육 교사도우미 자격증 개발 및 과정 운영 등

< 신중년 정책 사례 : 서울시 50플러스 정책 >

- ❖ 서울시는 50세~64세의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50플러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50플러스캠퍼스(권역단위), 50플러스센터(자치구 단위)를 운영 중
- ❖ 상담,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커뮤니티 연계 등 원스톱으로 인생설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동년배 상담과 교육을 실시

- 폴리텍,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여성친화(선호) 과정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강화**
 - ※ 4차 산업 전문역량 개발 프로그램 확대 제공, 귀농 귀촌 여성 창업교육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화 새일센터 운영 강화

③ 취약계층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장애인 대상 직업능력개발원 추가 신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확대 등 공공 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하여 직업교육훈련 접근성 제고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및 평생학습 계좌제 등에 시·청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및 탈북민 지원을 위해 개인별, 한국어 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소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제공
-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적응과 직업 준비를 위해 직업계고 내 대안 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가칭)공립형 직업 대안고등학교’를 지정·운영
 - * 공립형 직업 대안학교에서는 목표 지향적 학습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적응과 심터 기능을 강화하고 노작교육 중심으로 사회 적응력 개발에 중점

④ 평생직업교육훈련과 복지의 연계 through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 구직자·근로빈곤층 훈련비 및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교육훈련기회 확보
 - * 취업 상담, 노동시장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투자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바우처 제공 확대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약 5천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 상당 지원(18)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기술·고급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과정을 다양화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 ※ 고용보험 기반 직업훈련체제로 비정규직,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교육훈련 혜택의 사각지대 존재 ('16년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7.6%)
 - *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훈련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5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 ❖ 주요과제 ① :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연계·통합을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구축
- ❖ 주요과제 ② :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재정투자 확대
- ❖ 주요과제 ③ : 직업교육훈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있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와 콘텐츠를 통합·제공
- ❖ 주요과제 ④ :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강화
- ❖ 주요과제 ⑤ : 올바른 직업관·직업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 및 홍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

①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구축

- 산업계, 교육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산학협력위원회*(총리 공동위원장)를 통해 범부처 직업교육훈련정책 연계·조정
 - * 법적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위원회 산하에 직업교육훈련분과*를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지원, 교육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추진
 - *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 정부, 유관기관 등 평생직업교육훈련과 연관된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상시적인 의사소통 기구 구성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고용청, 노·사단체, 지역 인자위 등 직업교육훈련 유관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지자체 주도로 관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인력수급 현황 분석, 연계·조정, 양성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등 수행
-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ISC, RC)와 직업교육훈련 간 연계·협력 강화

-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해 **산업계·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교육훈련 및 인력 수요를 교육훈련기관에 전달**
- 학과·과정 개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기관 평가, 취업 연계 등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더 많은 역할 수행 유도

② 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혁신인재 양성, 고용안전망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 직업계고는 **학과개편 등 재구조화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대학은 재직자 후학습 기능을 중심으로 지원
 - ※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370\$, OECD 평균의 53.7% 수준('16, OECD)
 - 현재 직접일자리아업 중심의 일자리 예산을 **직업교육훈련지원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능력개발 기회가 부족한 직업교육훈련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 확대**
 - * 적극적 노동시장 예산 중 직업훈련 예산 비중('15) : 우리나라 10.8%, OECD 평균 24%
 - 국고투입 확대와 연계하여 지자체 대응 투자 확대도 유도
-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폐지**
 - ※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 초·중·고등교육법(직업계고), 고등교육법(전문대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재직자·실업자훈련) 등

③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콘텐츠 인프라 구축

-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양성 정책 수립,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을 위해 **인력수급전망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 파악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별 **미래 숙련수요 및 필요 역량을 조기에 도출**
 - ※ ICT 분야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일자리 예측을 수행하여, 유망 新직업 발굴 및 필요 역량 변화를 파악

- 직무 변화를 사전에 예측·대응할 수 있는 (가칭)**숙련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훈련방향 설계 지원

※ 지역·산업별인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기술·고용노동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직업교육훈련 관련정보 검색과 공유가 가능한 정보 플랫폼* 구축

- *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시설, 현장실습, 노동시장 정보, 도제프로그램, 인력매칭, 교육자원 공개(OER), 패널 구축, 통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등록·검색·상담
-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교육훈련정보 서비스**에 활용
 - * 농림부(농업인력포털), 고용부(워크넷), HRD-Net, 월드잡플러스, 마이스터넷, 큐넷, 교육부(커리어넷, 하이파이프,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복지부(복지로), 여가부(여성세일센터) 등
- 직업교육훈련 콘텐츠의 저변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유·무료로 판매·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 구축
 - * 지식, 기술, 노하우 보유자가 프로슈머로서 콘텐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④ 직업교육훈련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 교육과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평가기준(성취수준)**을 제시하여 중등 직업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직무역량 수준을 보장**
 - ※ 학점제와 성취평가제를 통해 충실한 교육과정 이수 유도
- **재직자 맞춤 운영평가***, 기관평가인증 지표 개선 등을 통해 고등 직업교육기관의 **후학습자 전담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 * 야간·주말·온라인 수업 개설,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후학습자 학습설계 지원 등
- 직업훈련 기관평가·과정심사의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훈련품질 관리 및 건실할 훈련시장 육성
 - 성과중심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성과정보 공개 등 **성과관리 개선 방안 마련**하여 수요자 및 훈련성과 중심으로 **훈련시장을 개편**
 - 부정·부실 훈련기관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 부정 훈련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등 **부정훈련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 제고

- 학생 및 교원의 직업교육훈련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 노동인권, 산업안전, 직업관 및 직업윤리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체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
 - ※ 현재 ‘진로와 직업’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 위한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공통과목으로 편성·운영됨
 -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홍보*
 - *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소기업 체험, 중소기업 재직선배·CEO와의 토크 콘서트,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연극 창작 등
 - 신규 교원 및 담임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직업교육 이해 및 중소기업 체험·이해 연수를 필수적으로 실시
- 언론·시민단체와 협업하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사회적 캠페인** 실시
 - 전문 직업인, 우수 중소기업, 각 분야 명장 등을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노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로 포럼, 박람회 등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친화적 문화 조성
 - 언론을 통한 기획기사 및 캠페인을 통해 미래 환경변화 대비 핵심 역량의 중요성과 생애에 걸친 직무역량개발 체계의 필요성 홍보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사회적 책임강화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에 직업교육훈련 항목을 포함하여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모색
 - * 노동부·교육부·산업부·중기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중
 - 산업체 CEO·관리자 대상으로 **노동인권, 노사간 직무능력 개발 협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수 및 홍보

붙임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 직업교육훈련의 법적 의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 OECD의 직업교육훈련(VET)에 대한 개념

- OECD는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에의 투자 증대’ 슬로건 하에 전 생애에 걸친 능력개발과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를 통한 순환교육모델(recurrent education)과 생애능력개발,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 투자 확대, 일과 학습의 연계 모델 등으로 ‘**학습경제론적 관점의 인적자원개발론**’을 배태
- OECD: VET은 특정 직업 또는 특정 유형의 직종에 맞게 설계되고 그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 * 의학, 법학 등 높은 수준 전문직종의 교육훈련도 VET 정의에 부합하지만, 통상 VET 범위에 불포함
- 미국에서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CTE(Career Technical Education)로 통용

□ 직업교육훈련의 범위

- 직업교육은 대상에 따라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직업교육-고등 직업교육**(교육부 관할), 성인(재직자, 구직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고용노동부 외 다양한 정부부처 관할)으로 구분
- OECD는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중심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 **초기교육훈련**(Initial VET)과 그 외의 실업자, 재직자 대상 **계속교육훈련**(Continuing VET)으로 구분
 - **평생직업교육훈련은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해 개인의 평생에 걸쳐 수행되는 학습을 포함**

□ 직업교육훈련의 전통적 개념

- 일반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폭넓은 개념의 목적 달성 추구(교육기본법)
- 직업교육훈련은 그러한 목적 중에서도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목적이 구체화된 교육
 -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특정 직무역량과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는 학습의 의미로 통용
 -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포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미래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개념

- 평생에 걸쳐 다양한 성공경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진로 선택의 길을 열어주고, 전문적 직업능력을 기르는 것 외에, 보완적으로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agile and transferable skills)을 개발하는 것
 - 범부처의 협력과 **수요자-공급자-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유기적 연대를 기반으로 추진 필요
 - * 학교, 학습자, 학부모, 기업, 노동조합, 정부, 지자체 등

추진전략	주요과제 (20개)	세부 추진과제 (65개)	관련부처
1.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① 직업교육훈련 체제 유연화	-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 활성화 -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 고등직업교육 학사제도 유연화·다양화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②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직업교육훈련 제공	-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확대 - 매치업 프로그램 도입 - 마이크로디그리 도입	교육부·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부
	③ 직업교육훈련 연계·통합 강화	- 교육훈련기관 간 연계 강화 - 사전경험학습인증 활성화 - 교육훈련이력 누적 관리	교육부·고용노동부 교육부·고용노동부 교육부·고용노동부
2.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고도화	① 고숙련 인재 육성 체계 내실화	- 직업계고-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숙련인력양성 -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 - 전문대학 제도 개선 - 고등직업교육기관 모델 마련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②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혁신	-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전환 - 직업기초역량 교육 강화 - 디지털 역량 강화 - 신기술 활용 교육훈련 제공	교육부·고용노동부 교육부·고용노동부 교육부·고용노동부 교육부·고용노동부
	③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제공	- 직업교육기관 재구조화 - 현장성 높은 교육훈련 제공 - 민간 기업 주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 자격의 현장성 강화	교육부 교육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④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직업계고 교원 개방성 확대 - 훈련기관 교·강사 역량 강화 - 기업현장교사 역량 강화	교육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① 전문직업인 성장 지원체계 구축	- 전문직업인 성장경로 제시 - 한국형 마이스터 제도 구축 - 생애 경로설계·상담·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최소화	교육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고용노동부 병무청
	② 재직자의 직무역량개발 여건 마련	- 재직자 학습권 보장 확대 - 내일배움 카드제 확대 - 기업의 기술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기재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재부·고용노동부
3.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 역량개발체계 확충			

추진전략	주요과제 (20개)	세부 추진과제 (65개)	관련부처
	③ 재직자의 후학습 접근성 확대	- 성인친화적 입학 학사제도 구축 - 유망직무·직종 후학습 강화 - 대학 외부시설을 활용한 후학습 허용 - 사내대학 활성화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④ 이·전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전직지원서비스 제도화 - 이전직자 상담·컨설팅·진로 프로그램 제공 - 이전직희망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 신중년 이전직 준비 여건 개선	고용노동부 교육부·고용노동부 교육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4. 사람 중심의 포용적 직업 교육훈련체계 구축	① 중소기업 재직자 직업 교육훈련 기회 확대	- 현장훈련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공동훈련 활성화 -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② 직업교육훈련 시각지대 해소	- 비정규직 맞춤형 지원 확대 - 영세자영업자 역량개발 지원 - 신중년 직업교육훈련 강화 - 경단녀 경제활동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부 고용노동부·여가부
	③ 취약계층 평생직업 능력개발 지원 강화	- 장애인 교육훈련 접근성 제고 - 다문화가족 및 탈북민 직업교육훈련 지원 - 직업준비 대안교실·학교 운영	교육부·고용노동부 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통일부 교육부
	④ 교육훈련-복지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훈련비·생계비 지원 - 평생학습 바우처 확대 - 실업자·고용보험미적용자 교육훈련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① 평생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구축	- 범부처 직업교육훈련정책 연계·조정 -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직업교육훈련 간 협력 강화	범부처 교육부·고용노동부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② 평생직업교육훈련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정비	기획재정부 교육부·고용노동부
	③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콘텐츠 인프라 구축	- 인력수급전망 고도화 - 정보 공유 통합플랫폼 구축	고용노동부·과기부 교육부·고용노동부
	④ 직업교육훈련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 직업계고 교육 품질관리 - 후학습 프로그램 질 관리 - 직업훈련 품질관리 강화	교육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	- 직업교육훈련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업인식 및 책임 강화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